

시론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한참 검경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다시 반격하는 형세이다. 검찰개혁은 역대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여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데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만 강한 하이에나 같은 모습을 보여 오면서 정치검찰 또는 정권의 시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개혁과제로 부각되었지만 그때마다 흐지부지 되었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가도 막상 집권을 하고 나면 검찰의 활용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검찰의 반발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이다

면서 입법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혁안대로라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다. 더구나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관까지 경찰로 이관되면서 경찰은 정보와 수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한손에 쥐게 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정보, 경찰행정까지 국가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공룡경찰이 되어 결국은 국민의 인권에 더 취약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에 대한 처방으로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설치, 정보경찰의 업무범위 제한 등 나름대로 경찰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긍하지 못한다. 당청정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는 지구대 수준의 자치경찰제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아니고, 국가 수사본부도 국가경찰 조직 내에 설치되는 한 실효성이 없으며, 정보경찰도 여전히 기존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다.

검찰개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이다.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완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도처에서 드러난다.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매우 높다.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을 개

혁하기 좋은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은 옳고 개혁이 나쁜 것이다. 개혁이 아닌 개혁이 되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검찰의 잘못된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해 왔는지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다. 현재의 상황은 그 근본원인은 간과한 채 막연하게 검찰은 미온조작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미온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 주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쪼개어 경찰에 몰아준다고 과연 개혁이 될까?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주면 경찰은 검찰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검찰은 정치검찰로 전락해서 국민의 공적이었다지만 경찰은 정치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결국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왜 검찰이 정치검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이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 있든, 경찰에 있든 국민에게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정치검찰이 되었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다. 승진하고 싶고 좋은

보직을 가고 싶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죽은 권력에는 호랑이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권한을 이리저리 쪼개서 옮겨보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안대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동안의 검찰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충성경쟁으로 대통령은 더 막강한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해법은 간단한데 이 부분을 놓고 싶지 않으니 내용이 산만하고 복잡해지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검사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법평의회’라는 기구가 있어 판검사 인사권을 행사한다. 사법평의회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여하기 하지만 합의체이기 때문에 전횡을 휘두를 수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사권을 정권으로부터 단절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형태의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개혁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문제의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를 도외시하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서로 합심하기를 바란다.

社說

道公 고속도로 낙하물 미온 대처 ‘위험천만’

고속도로는 수많은 차량들이 시속 10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화물차 등에서 예기치 않은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 종종 사고로 이어진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낙하물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더라도 이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낙하물을 ‘도로위의 시한폭탄’에 비유한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수시로 도로를 순찰하며 떨어진 낙하물을 발견해 수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 등 도로 현장 관리와 책임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5월23일자 7면) 회사원 이모(36·여)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5분께 광주-무안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한평휴게소를 1km 앞둔 지점에서 ‘팅’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무엇인가에 부딪힌 소리가 느껴졌다. 500여m를 더 주행하다가 2차로 옆 갓길에 정차해서 살펴보니 차량이 파손된 상태였다. 그리고 심각하게 허부가 찢겨 결국

폐차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낙하물은 가로 40cm·세로 30cm 가량의 화물차의 뒷바퀴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물품이었다. 이씨는 사고 발생 직후 한국도로공사 측에 신고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보험사 통해 이야기하라’는 통명서인 답변이었다고 한다. 이씨의 차량을 파손시킨 낙하물에는 ‘함평중형’이라는 글씨와 제조사가 버젓이 적혀 분명한 증거물인데도 이에 대한 추적과 처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가해 차량이 책임을 회피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 기간도 평균 6개월 이상으로 길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니 고속도로 구간 내 낙하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위의 시한폭탄’인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재불량 차량 단속과 아울러 신속한 사후조치도 이뤄져야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기대 크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대안으로 수소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 수소에너지 경제는 지난 2010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해 점진적으로 2040년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소가 앞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 청정에너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남도가 저탄소를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계획’은 전남의 탄탄한 에너지산업 기반, 여수산단 부생수소 및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1천991GWh)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 여건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현재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석탄가스화, 천연가스 또는 나프타 수증기 개질, 부분산화, 열분해 등이 있으나, 이중 수증기 개질 방법이 높은 수득율을 얻을 수 있어 상업적 기술로서 가치가 높다.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 수

소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해상풍력 잠재량(1.24GW)에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해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로 꼽힌다. 그린수소 연구개발 및 생산·실증 거점 육성, 수소 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 구축,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및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에 나선다. 권역별로 동부권은 수소 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특허산단을 조성하고 수소의 생산·저장·이송 관련 상용화 R&D를 추진한다. 중부권은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수전해 등 그린수소 원천기술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광 e-모빌리티 산업용 소형 연료전지 개발에 주력한다. 서부권은 서남해안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연계한 그린수소 대규모 생산 및 실증단지 구축과 함께 그린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수소산업 잠재력과 생태계조성을 바탕으로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의 ‘그린수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문화난장



최정낭
문화학 박사

‘미디어아트’작 실험하게 생각 되시나요? 얼마 전 미디어아트와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미국의 ZERO1과 미국무부가 주최하고 미국대사관과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아메리칸 아트 인큐베이터 워크숍’을 통해서였다. ‘스마트 홈과 사회적 포용’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로 사회적 이슈들을 기술과 접목해 미디어아트로 표현하는 워크숍이었다. 작가들은 물론 미디어아트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에게도 문호가 개방돼 필자와 같이 예술작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도 상당수 이 워크숍에 참가했다. 1개월여 간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 과정은 미국 U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워크숍에 참가하다

CLA 대학의 교수 겸 리드작가인 로렌캅카시가 자신이 직접 설계한 ‘p0is’라는 코딩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코딩이란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컴퓨터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얼굴 표정이나 몸의 위치, 사물인식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기본적인 코딩프로그램을 습득한 뒤 참가자들은 팀별로 구성됐다. 이후의 워크숍부터는 팀원들끼리 자유롭게 작업시간을 정해서 워크숍의 주요 주제인 ‘내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순간이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 왜,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그 당시의 느낌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이와 반대되는 ‘내가 소속감이나 환대를 받았을 때는 언제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소는?’에 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각자의 경험을 사회적 포용의 관점으로 확장시켰고 이를 토대로 팀의 공동의견을 도출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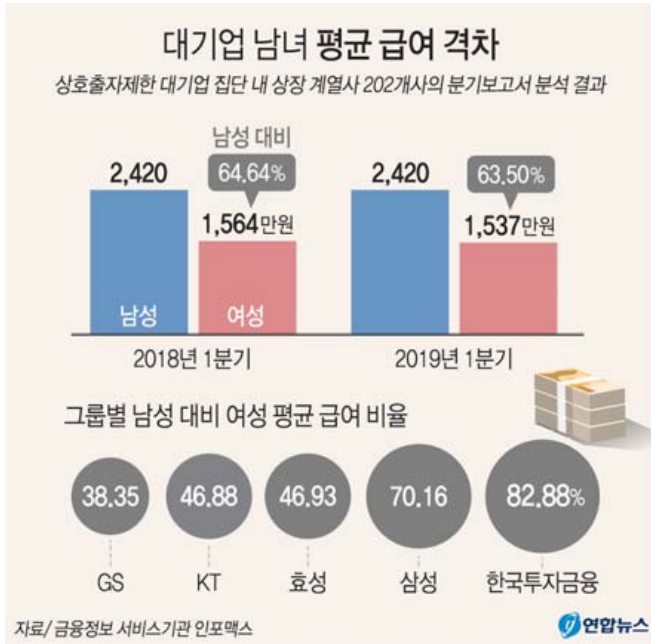
다. 도출된 의견을 주제로 삼아 작품 아이디어를 구성했고 작품 기획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안됐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구체화됐다. 기술적인 문제는 로렌캅카의 도움이 컸다. 팀원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4개 팀의 작품들이 완성됐다. 1팀은 ‘III-literacy: 아날로그-디지털 기술과 장치들이 공존하는 미디어환경에서 (비)문맹 경험을 구현’했고, 2팀은 ‘I LOVE YOU!’ 한국전통 옷을 입을 통해 원자화된 가족 구성원들의 이해와 존중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3팀은 ‘Feel-Fill: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불안함과 공허함(Feel)을 예술참여 행위를 통해(Fill) 채워 넣음으로써 상처를 치유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구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팀은 ‘How to Understand Your Daughter: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갈등을 관찰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고 있다. 4개 팀의 작품들은 빛

고을 아트스페이스의 미디어 338에서 지난 10-11일 전시됐다. 오프닝에서 각 작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작품 프레젠테이션과 전문가 토크 리뷰, 객석질문 등으로 이어지면서 뜨겁고 깊이 있는 의견들이 오갔다. 이 워크숍을 통해 광주에 거주하며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미디어아트 작가들을 알 수 있었고, 작가들의 작품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시민도 관심만 있다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바로 광주가 그런 곳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미디어아트 창도시, 광주’라 할 만하다. 워크숍 결과물들은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2019 ISEA(세계전자예술심포지엄)의 특별전 에 다시 한 번 선보이게 된다. 시민과 작가들이 어떤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들었는지 보러 오시길 바란다.

그래픽 뉴스

대기업 남녀 급여 격차 벌어져...여성이 남성의 64% 하회

올해 1분기 대기업의 남녀 간 급여 격차가 1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정보 서비스기관 인포맥스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내 상장 계열사 202개사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여성 직원의 올해 1분기 1인당 평균 급여는 1천537만원으로 남성(2천420만원)의 63.50%에 그쳤다. 작년 1분기에는 여성 평균 급여(1천564만원)가 남성(2천420만원)의 64.64% 수준이었다. 그룹별로 보면 GS그룹 계열사의 여성 평균 급여는 992만원으로 남성(2천587만원)의 38.35%에 불과해 격차가 가장 컸고 KT그룹(46.88%), 효성그룹(46.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그룹 계열사의 여성 직원은 평균적으로 남성 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한교투자금융그룹의 경우 여성 직원 급여(2천749만원)가 남성(3천317만원)의 82.88% 수준이었고 삼성그룹도 여성 직원 급여(1천728만원)가 남성(2천490만원)의 70.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보면 여성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반면 남성의 평균 급여액은 증가한 회사도 32곳 있었다. 예컨대 LS전선아시아의 경우 남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작년 1분기 1천433만원에서 올해 1천733만원으로 20.93% 증가했으나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는 같은 기간 1천500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30.00% 감소했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아동·치매노인 실종 지문등사전등록제로 해결

가정의 달 5월, 날씨도 포근하고 어딘가 놀러가기 좋은 계절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 지역행사를 벌이고, 주말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 생각에 들뜨기 좋은 때다. 경치 좋고 즐길 거리 많은 곳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붐빈다. 당연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경찰도 이때가 되면 바빠진다. 이 시기 경찰이 크게 관심 갖는 사안은 실종예방일 것이다. 인적 많은 곳에서 자칫 한 눈 팔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흔하다. 다만 아동 실종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실종도 해마다 늘

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해 경찰청에서 접수한 실종 신고 건수는 무려 4만2천99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8% 상승한 수치이다. 실종된 아동이나 치매노인은 범 죄나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쉽다. 당연히 가족들은 찾을 때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찾은 뒤를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지문이

나 사진과 같은 신체특징을 미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사시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하는 개념이다. 실종된 아이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발견하기 힘들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색범위도 넓어지고 아동 등의 생존도 보장하기 힘들다. 이른바 골든타임 내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문 등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 사용하면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대단하다. 지난 2월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문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발견하는 데 56시간 이상이 소요된 반면, 지문사전등록을 한 아동 등의 경우 46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73배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셈이

니 그 효과가 대단하다. 지문사전등록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인터넷 안전Dream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관련 앱을 통해 등록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된 이후에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야 소용이 있는 법이다. 그리 어렵지 않은 지문등사전등록제, 내 소중한 아이와 함께 지구대나 파출소 옆을 지날 일이 있으면 잠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김희창·해남경찰서 경무과



/김희창·해남경찰서 경무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